

IIRI Online Series

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 전망

한 석 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22. 7. 14

윤석열 정부의 한·중관계 전망



한 석 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미동맹 재건’이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등 미국·일본에 대해서는 뚜렷한 외교 방향을 제시했던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對中) 당당한 외교” 선언이나 “상호존중의 한·중관계” 정립과 같이 향후 한국이 추구할 한·중관계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 언급한다거나,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토대로 한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행보를 거침없이 취하였다. 국내 외의 일부 매체들은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를 ‘분명한 친미적 입장’이라고 평가하면서 미·중 갈등 시대에 윤 정부의 친미적 성향이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친미적 행보가 향후 한·중관계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중 행보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한계점(底线)을 넘지 않으면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고 있는 데다가, 중국도 윤 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복잡한 국내 상황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갈등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3대 이슈(미·중 갈등,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

이고, 또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전랑외교(战狼外交)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함에 따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지지하는 우군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윤 정부의 외교적 행위가 중국이 설정한 한계점을 넘지 않는 한 한국과의 갈등을 조성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한·중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는 대만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內政)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여 강력히 반발한다. 그러나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결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 최초로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어느 수준에서 언급할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이 있다. 둘째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6년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철수를 목표로 한국에 경제제재까지 시도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사드를 철수할 생각이 없다. 중국 정부는 사드와 관련하여 사드의 추가배치 및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체계로의 참여, 그리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을 금기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드 추가배치”를 언급한 것을 중국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사드 추가배치를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와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한·중관계 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취했던 조치들은 한·중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윤 정부는 취임과 함께 발표했던 「110대 국정과제」에 사드 추가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비록 윤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비정상적이고 불충분하게 가동되고 있는 기존 사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사드 추가배치는 향후에 검토하여 국익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윤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2022년 공동성명에 나타난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급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윤 정부가 한·중관계 악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윤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둘째, 중국도 윤 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파견하였고,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동맹 강화 행보에 호응하거나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적 동맹 규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비판이나 경고를 자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반면, 윤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나 경고는 주로 환구시보(环球时报)와 같은 중국의 일부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일부 매체들의 기사나 분석, 또는 기고 등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중국 정부의 의사로 해석하여 현재의 한·중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정부의 실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도 윤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복잡한 국내 상황이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낮은 성장,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며 이러한 경제 하강 국면에서 중국은 한국과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총서기 3연임을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진핑 주석 및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원만하게 결론짓기 위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선호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시도한다든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수준의 관여를 공표하는 등 중국을 실질적으로 자극하는 조

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거나 사드 사태 때와 같이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시도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된다. 한·중관계 3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30년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냉철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한·중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끝/

저자 소개

한석희 교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터프츠대학교(Tufts University)의 플레처 스쿨(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북경대학교 강의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연구원 등의 경력을 쌓은 후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5~17년에는 주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 재직하였다. 연구주제는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안보 및 중국 권력정치 등 중국 관련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Email: shan65@yonsei.ac.kr)